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부실 행정' 또 도마 위

지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이어 올해도 지적사항 찾은 설계변경 예산·공사기간 늘고 소송 패소 지적도

그동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문제점이 드러난 광주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이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건립 사업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반면, 완공은 차일피일 늦춰졌다는 불만 목소리가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12일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공공시설 복합화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이용편의를 증대하고자 총 사업비 226억원을 투입

해 품암동 산 13번지에 8필지에 지상 1~4층 규모(부지 1만424㎡·연면적 5천595㎡)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준공은 내년 상반기로 예정됐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지적사항이 제기되면서 서구 의원들로부터 눈총을 사고 있다.

대표적인 지적 사항은 수차례 진행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과 완공 지연이다. 실제 지난 2016년 계획수립 당

시 89억원(비품비 별도)이었던 사업비는 137억원이나 늘어났다. 완공도 최초 계획보다 4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지반조사 당시 지역 전체를 살펴지지 않고 일부만 구멍을 뚫고 확인하는 바람에 쓰레기가 매립된 지역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는 해프닝도 발생했다.

이 탓에 지하 공간 활용이 불가능해지면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이 당초 지하 1·지상 3층 규모에서 지상 1·4층으로 변경되기도 했다.

이러한 설계변경을 이유로 서구가 지난 2021년 신청한 국고보조금 20억원도 적언치 않은 대목이다.

앞서 서구는 2018년 부지 확장 등을 이

유로 국고보조금 10억원을 요청했지만 사용기간을 넘겨 반납을 앞두고 있다.

그러다 2021년 다시 설계변경을 이유로 국비 20억원을 신청했다. 이를 두고 실제 사용에 비해 턱없이 큰 금액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태진 서구의원은 "실제 필요한 사업비가 3억원 정도에 계산되는 데 20억원을 신청했던 것은 반납해야 할 10억원을 메꾸기 위함"이라며 "부실 행정으로 인해 복지 등 필요한 부분에 국비가 투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선 토지수용자와의 행정소송 패소로 발생한 7천만원의 손실도 문제로 떠올랐다.

지난 2020년 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 소유자는 사업부지 수용재결 절차에 따른 손실보상금 중 수목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지 않았다며 보상금 증액을 요구했다.

그러다 서구와 이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지난 2020년 소장을 접수했다.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져 서구는 손실보상금 증액분과 손실보상금 이자, 감정평가 수수료 등을 추가 지출하게 됐다.

이를 두고 전승일 서구의원은 "서구의 노력이 있었다면 토지수용자와의 협상과 빠른 사업 추진으로 행정소송까지 가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7천여만원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 의원은 "센터 준공 전 쓰레기 매립어부 미파악과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당초 지하 1-지상 3층 건물이 지상 1-4층으로 변경됐다"며 "면적·규모는 당초 계획보다 감소했음에도 예산은 늘어나는 등 일관성 없는 숫자놀음 행정이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구 관계자는 "처음 예산 책정 당시 일반적인 건축물 기준으로 면적에 따른 비용을 산출했는데 문화회관과 같은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이러한 계산이 적합하지 않다는 게 뒤늦게 확인됐다"며 "그러다 보니 예산 증액이 불가피했고 총 사업비 가운데 불용액 10억원이 다시 반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재기자



가로화단 보호막 설치 12일 오전 광주 북구청 공원녹지과 도시녹화팀 직원들이 관내 오통동의 한 도로 가로화단에서 겨울철 눈과 바람, 제설용 염화칼슘으로부터 풀과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빗집으로 만든 거울을 설치하고 있다. <광주북구제공>

재개발구역 건물은 누구 소유...대법 "보상됐다면 시행자 것"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보상법 기준에 따라 기존 건물값을 공탁했다면 건물 소유주에게는 퇴거는 물론 건물 인도 의무도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순수 대법관)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A사가 주민 B씨를 상대로 낸 퇴거청구소송에서 "B씨에게 건물 이전·인도 의무는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사는 2020년 인천의 한 지역에서 43만5천㎡(약 13만1천500여평) 규모의 토지수용 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인가받았다.

주민 협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사업구역 안에 주택과 컨테이너 등을 보유

한 B씨 등 일부 주민이 토지수용에 반발했기 때문이다.

A사는 이 문제를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가져갔고, 위원회가 토지보상법 기준에 따라 정해진 B씨 소유의 시설물(지장물) 이전 보상금 1억6천여만원을 공탁했다. 이후 A사는 지장물 인도와 B씨의 퇴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B씨가 퇴거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도 시설물을 A사에 인도하거나 알아서 이전해줄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 A사가 사업 인가를 받기는 했지만 B씨 소유였던 시설물의 소유권까지 협의나 수용 절차를 거쳐 취득하지는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대법원은 B씨에게 시설물을 인

도할 의무 역시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현행 토지보상법 75조 1항은 사업 시행자가 토지에 달린 건축물 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이런 시설물의 이전비가 물건 가격을 넘으면 물건 가격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단서가 달렸다.

대법원은 A씨와 같은 사업 시행자가 토지보상법에 따라 물건 가격으로 이미 보상을 했다면 B씨 소유의 시설물을 제거할 수 있고, B씨는 이 과정에서 생기는 물건의 가치 손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B씨가 자기 돈을 들여가며 시설물을 이전(철거)해줄 것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점유를 A사에 인도할 의무는 있다고 덧붙였다. /연하뉴스

특하면 '스톱'...목포시내버스 공영제 도입?

시, 타당성 검토 용역...장단점 비교·분석 목표형 운영 체계 마련

목포시는 12일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 개편·준공영제 실행방안 연구용역"에 이어 내년 1월 '공영제 도입 타당성 검토 용역'을 병행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에 시작할 용역은 목포시 실정에 가장 적합한 시내버스 운영체계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시는 시의회와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공영제 도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4월 준공영제용역을 착수

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목포시내버스 운영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을 시가 받아들인 것에 따른 것이다.

당초 시는 준공영제용역을 통해 내년 1월까지 굴곡·중복 노선 등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타 지자체의 운영 방식과 문제점 등을 검토해 목표형 준공영제를 설계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15일 시내버스 노조 작업 철회를 골자로 한 합의에 따라 시내버스회사가 이달 말까지 시에 제시할 경

영 개선(안)과 연계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토론하기 위해 준공영제용역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별도로 공영제용역을 1월 초부터 병행·추진한다.

앞으로 시는 내년 준공영제용역과 공영제용역 결과를 종합 분석한 뒤 시의회 협의, 공영회 개최 등을 거쳐 목표형 시내버스 운영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시내버스회사의 가스비 미납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 중단으로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시는 12일부터 11개 주요 시내노선에 비상수송차량 58대를 투입해 운행 중이다. /목포=정해선기자

교육공무직 전남노조 "학교 급식실 종사자 처우 개선" 촉구

"검진 결과 전국 187명 폐암 의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남지부는 12일 학교 급식 종사자들에 대한 산재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육공무직본부 전남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에서 실시된 급식실 폐CT 검사 중간결과에서 노동자 187

명이 폐암 의심 또는 매우 의심 판정을 받았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전남지부는 "187명은 어디까지나 '중간결과'일 뿐이다. 검사 대상인 55세 이상 10년 이상 근무자에 국한된 결과일 뿐 아니라 전국 교육공무직원의 35%를 차지하는 경기, 충북, 경남의 검사 결과는 취합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누락된 3

개 지역을 포함한 최종 검사결과가 나온다면 폐암 의심 또는 매우 의심 판정을 수백 명에 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 결과는 동일 연령 일반 여성에 비해 35배나 높은 충격적 발병률"이라며 "교육 당국은 폐암 예고를 받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심정을 한 번이라도 깊이 생각해 보았나"고 분노를 표했다.

전남지부는 "급식실 폐암 산재 인정 후 2년 가까이 흘렀고 벌써 5명이 사망했다"며 "우리는 죽음의 급식실에 대한 진정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거도 갯바위서 낚시하던 50대 실종...이틀째 수색

신안군 가거도에서 낚시객이 실종돼 해경이 이틀째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12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남 오후 2시21분께 신안군 가거도 3구 등대 인근 갯바위에서 A(50대)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타지역에서 온 A씨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갯바위 낚시를 하다가 미박집을 나섰다.

A씨가 나간 후 연락이 되질 않자 민박집 종업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는 A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낚시 짐만 남아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가거도 출장소·육경·민간 인력 등 50여명을 투입하고 헬기도 동원해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신안=양홍기자

그러면서 전남학비연대회의가 오는 21일 급식실 조합원과 함께 총궐기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17개 시도교육감에 대해서도 "중대 재해처벌법 고발과 함께 전국의 사업장 전수조사를 통해 폐암 유병 노동자가 발생하고도 환기시설 개선 등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은 사업장에 '작업 중지권'을 발동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채만기자

www.e-dk.co.kr
DK 디케이 주식회사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